

#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기업이 대비해야 할 주요 법안서]

## 6차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학습내용: 해당 차시에서 학습할 학습주제(목차)를 제시해 주세요.</li><li>▪ 학습목표: 해당 차시 학습을 통해 <u>학습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u>를 학습내용과 연계하여 작성해 주세요.</li></ul>

### ▶ 학습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의미
2.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3.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특례

### ▶ 학습목표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3.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법적 내용 위반시 처벌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4.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특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내용의 위계 파악을 위해 일관성 있는 번호 체계로 작성해 주세요.</li> </ul>

## I.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의의

먼저 ‘개인정보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및 표준지침 제2조 제1호). 이러한 개인정보의 많은 처리방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먼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즉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처리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주체 자신도 자신의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활용되어서 자신에게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한 결과를 발생시킬지 알 수 없다. 나아가 정보를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서도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자신이 활용하는 목적 외에도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수집과 이용에 있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란 현재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화무쌍하며, 또한 이를 활용한 정보기술 또한 오늘의 기술과 내일의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미래가치성이 훨씬 높아서, 오남용의 유혹이 항상 자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는 규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법이자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특히 수집과 이용에 있어서 어떤 제약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 수집이란?

개인정보 처리의 첫 단계인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표준지침 제6조 제1항). 이때 수집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직접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민간업체 등)가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주체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신용평가기관 등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도 한다.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처리과정에서도 자동적으로 개인정보가 생성될 수 있는데, 상품주문내역, 통신내역, 위험고객명단, 근무평가기록, 신용평가기록, 고객 위치정보 등이 그러하다.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근거 (법 제15조 제1항 및 표준지침 제6조 제2항)

개인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이용될 경우 회복불가능한 권리침해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은 물론이고, 수집에서부터 엄격히 규제될 필요성이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근거로 6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수집 및 이용 방법은

첫째, 개인정보의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이다. 이때 정보주체의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되어 해당 개인정보처리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절

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둘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그리고 셋째, 공공기관의 소관업무수행을 위해, 넷째,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이 가능하다.

나아가 다섯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달성을 위해, 여섯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다 우선 시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섯가지의 근거는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모두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세 번째 근거인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6가지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하여 표준지침 제6조에서도 이러한 근거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하고 있다.

## 1)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및 사전적 고지(제15조 제2항)

개인정보 수집의 첫 번째 근거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여야 한다. 이러한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로는 서명날인, 구두 모두 가능하며 나아가 오늘날 인터넷에서 각종 다양한 온라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므로 각종 온라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는 동의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명시적 동의**). 이때 명시성은 반드시 문서이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개인정보는 현실공간에서 보다는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인터넷에서 회원가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즉, 온라인에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이때 회원가입시 정보주체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는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란에 동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의 대표적 사례

-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에서 요구되는 각종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
- 인터넷포털서비스 회원가입, 인터넷쇼핑몰 회원가입, 온라인뱅킹 등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체크하는 경우
- 각종 자문비, 특강비, 회의비 지급신청서 작성시 요구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체크하는 경우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첫째, 개인정보수집·이용의 목적이 무엇인지, 둘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셋째,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넷째, 무엇보다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만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사전적’ 고지 표시가 없으나 표준지침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명시적으로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동법에서의 해석 또한 사전적 고지로 이해해야 한다(**사전적 고지**).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 등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기술적인 조작, 해킹 등을 통한 불법적 수집이 가능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표준지침 제6조 제4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성격, 게시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개인정보 동의없는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의결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 수집 및 이용<sup>1)</sup>**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범죄 수사와 내사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SNS 등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범죄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성명,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주소, 업체명 등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09-130호)

**2) 특별한 법률규정 및 법령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표준지침 제6조 제2항 2호, 3호)**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목적의 범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표준지침 제6조 제2항 제2호).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와 정보를 이용하는 주체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즉 법률규정이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자는 다른 제3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법률에서 수집·이용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이 있으면 족하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와 위의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 모두 제3자에게 제공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규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와 이용한 자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동법 제15조 제1항 2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수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그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정보주체로부터 보다는 제3자로부터 수집·이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을 들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집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도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정보처리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가 되는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수집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표 #: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수사기관의 적법성 여부]**

■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1) (사례중시)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1, 32면.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의 범위에 있어서 하위법령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개인정보수집을 허용하는 특별규정인 만큼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하위규범인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이고 고시, 조례 등의 하위규범에 있어서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령 등 하위규범에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2)</sup> 왜냐하면 개인정보의 활용 및 그 항목들이란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수집·이용의 필요성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즉각적인 법률개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등을 규정한 법률에서 구체적인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하위규범에 적시하면서 위임하는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보다 넓은 의미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령은 법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의미한다. 즉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이러한 의무의 이행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표준지침 제6조 제2항 제3호).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시<sup>3)</sup>

▶ 「신용정보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병역법」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를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

2) 박노형, 개인정보보호법, 박영사 2020, 161면.

3) (사례중시)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1, 32면.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sup>4)</sup>

- ▶ 「소비자기본법」에서 사업자가 결함상품 리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의 게시판 사용자의 본인 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 제15조 제1항 3호 및 표준지침 제6조 제2항 4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영리적 목적이 아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이뤄지므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의 목적 아래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표준지침 제6조 제2항 제4호). 즉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률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고, 그 소관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이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으로 이해된다. 즉 위 2)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구분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상 의무준수’에서의 ‘법령’과는 구분이 된다고 한다.<sup>5)</sup> 공공기관이 자신의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령 등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명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표준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예로는 정부조직법, 각 기관별 직제규칙 등에서 정하는 소관 사무,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에서 공공기관에 소관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예시 <sup>6)</sup>

- ▶ 인사혁신처가 「정부조직법」 제22조의3,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등 관리를 위해 공무원 인사 관련파일을 수집·이용하거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4) (사례중시)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1, 33면.

5) 박노형, 개인정보보호법, 박영사 2020, 163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보험급여관리 등을 위하여 진료내역 등을 수집·이용하는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표준지침 제6조 2항 5호)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이 어렵거나, 또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표준지침 제6조 5호).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는 경우 지식정보사회에서 데이터 경제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처럼 정보주체와의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물론 개인정보처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특정 개인정보의 처리 없이는 계약체결의 어려움과 그 계약이행이 불가피 내지 현저히 곤란한 경우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 ■ 계약체결 사례 및 계약이행 사례 <sup>7)</sup>

##### ▶ 계약체결사례

-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을 위해 청약자의 자동차사고 이력, 다른 유사보험의 가입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거래 체결 전에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평가를 위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 계약 이행 사례

-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주소,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경품행사시 당첨자에게 경품을 발송하기 위해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한편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 제3항).

#### 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이익을 위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 5호 및 표준지침 제6조 제2항 6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나(법 제15조 제1항 1호 및 표준지침 제6조 제2항 제1호), 정보주체는 물론이고 그 법정대리인 또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생명이 위독하거나, 재난, 사고 등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수술 중이거나 심신상실 및 정신미약 등의 상태인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밖에도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처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동의받을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재난, 사고, 위중한 수술 등에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이익과 손해를 비교해볼 때, 이익이 월등히 큰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 신체, 재산이라

6) (사례중시)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1, 33면.

7) (사례중시)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1, 34면.

는 이익은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제한된 이익에 한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급박성이라는 시간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에  
게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 급박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sup>8)</sup>

- 조난·홍수 등으로 실종되거나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연락처, 주소, 위치정보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안에 있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 해당 자녀 또는 부모의 이동전  
화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한편 제3자의 급박한 이익을 위한 경우는, 수집·이용되는 정보주체의 이익과 충돌된다. 「개  
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와 달리 조문에서는 이익형량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  
나, 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이익형량에 있어서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이 정보주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우월해야 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달성을 위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 6호 및 표준지침 제6조 제2항 7호)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익형량에 따라 우월한 이익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의 수집과 이용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의 상당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아무리  
우월한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정당한 이익달성 사례 <sup>9)</sup>

- 사업자가 요금정산·채권추심 등을 위하여 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역, 과금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생성·관리하는 경우
- 사업자가 고객과의 소송이나 분쟁에 대비하여 요금 정산자료, 고객의 민원제기 내용 및 대응  
자료 등을 수집·관리하는 경우

■ 의결례 : 철도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하여 두 손을 촬영하는 것 <sup>10)</sup>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고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폐쇄된 공간인 철도차량 운전실에 폐쇄회  
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각종 계기판과 안전운행장치 등으로 구성된 운전제어대와 그 위에  
위치한 기관사의 두 손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정보를 최장 7일간 각 철도차량 운전실 저  
장장치에 저장하고 철도사고 시에만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열람·이용한 사안에서 ① 철도사  
고 원인규명과 승객의 안전 확보가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며 ② 본건 영상정  
보의 수집 및 이용이 그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하며 ③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④ 본건영상정보의 촬영 대상, 보관 기간 등을 감안하면 한국철도공사의 정당  
한 이익이 본건 영상정보의 위와 같은 촬영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기관사)의 개인정

8) (사례중시)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1, 34면.

9) (사례중시)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1, 35면.



보자기결정권보다 명백히 우선한다는 이유로 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사유가 있다(보호위원회 결정 제2015-12-22호).

### 7) 위반시 법적 효과(법 제75조 제1항 및 제2항)

위에서 살펴보았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근거 규정(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법 제75조 제1항 제1호).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아래 개인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제15조 제2항)이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법 제75조 제2항 제1호).

[표 #: 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

위반행위	법적 효과	근거규정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수집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 제1항
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75조 제2항

### 3.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법 제15조 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의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개인정보에 대한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더라도 일정한 제한 아래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게 된 것이다. 이는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다소 반하는 내용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2020년 2월 4일 신설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 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그 제한적 범위로 세 가지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설령 당초의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이라도 초기의 수집목적과 완전히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되고 당초의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여야 하고, 둘째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셋째는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정보주체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과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후 동 규정의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신설되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추가이용과 달리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며(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나아가 동법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동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에서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지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이익의 범위를 완전 넓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 ‘부당한 침해’가 아닌 경우로 그 추가적인 이

10) (사례중시)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1, 35면.

용의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정보주체의 식별에 대한 우려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로 규정하여 가명처리의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수집된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을 위한 전제의 판단 기준<sup>11)</sup>]**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수행 여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고려사항들의 판단기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사전에 공개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판단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어야 한다.

**[표 #: EU의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례<sup>12)</sup>]**

- LP음반 판매 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기적으로 LP음반의 카탈로그를 보내다가, 오디오테이프, CD, DVD형태의 음악 카탈로그도 보내는 경우(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2020, 96면)
- 약국에서 다른 고객의 의약품을 잘못 가져간 경우, 약국이 고객에게 위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처방 병원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전화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 법령표준해설례, 25)

## II.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법 제16조)

위에서 살펴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그밖에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법 제16조)

### 1. 비례성원칙(법 제16조 제1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요건(법 제15조 제1항)을 충족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수집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제한되어야 한다. 즉 비례성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보산업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개인정보는 활용도와 가치가 높으므로 고의이든 과실이든 오남용의 가능성이 항상 높다. 따라서 수집·이용목적에 한해서만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수

11) (사례중시)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1, 36면.

12) (사례중시)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1, 36면.

집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2. 동의의 임의성확보 (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표준지침 제6조 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6조 제2항). 일반적으로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받을 때, 필수적인 동의 항목과 선택적인 동의 항목이 동의서에 함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6조 제3항).

표준지침 제6조 제4항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수집시 임의성이 확보되도록, 정보수집의 필수적 동의와 선택적 동의를 꼭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정보주체에게 정보제공 동의의 임의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III.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특례 (법 제39조의3 제1항)

위에서 살펴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의3에서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그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면서 신설된 것이다. 데이터3법 개정의 큰 줄기인 2020년 2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목적이 데이터이용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인 만큼, 그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감독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 분산되어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신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었던 만큼 이제는 법령의 통일화를 통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근거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 1. 이용자의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특례(법 제39조의3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수집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근거와 다르다. 먼저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가장 일반적인 근거인 정보주체자인 서비스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은 같다. 다만 아래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법 제39조의3 제1항), 이러한 공지해야 하는 사항의 변경시에도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 이러한 변경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자 동의에 앞서 사전공지해야 하는 항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2.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특례 (법 제39조의3 제2항)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동법 제39조의3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없이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셋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법 제39조의3 제3항)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주체인 서비스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법 제39조의3 제3항). 이는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던 것과 유사하다. 즉 동법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원칙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 함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법 제39조의3 제3항 제2문)

## 4.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법 제39조의3 제4항)

정보통신서비스는 성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다. 오늘날 건강·의료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등의 콘텐츠가 정보통신서비스로부터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미성년자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성인 보다 떨어지므로 무분별한 동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용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도 확인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법 제39조의3 제4항 후단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48조의3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다음의 여러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첫 번째는 동의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며,

네 번째는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섯째는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이며,

여섯째는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이다.

마지막 일곱째의 방법으로는 그 밖에 위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령에서는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48조의3 제1항).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시행령 제48조의3 제2항에서는 이러한 동의 내용을 정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의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설령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의의 주체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에게 별도로 특별한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39조의3 제5항). 즉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호위원회에게도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즉 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39조의3 제6항).

<b>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⑤</b>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